

‘06년 비정규직 통계 조사 결과 분석 보고

◇ 선택 동기(자발적·비자발적)에 따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

〈 요약 〉

-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5,457천명)**로 작년 동기 대비 **26천명 감소** (’01년 이래 비정규직 첫 감소)
 - 고용구조의 개선보다는 경기적 요인이 주로 작용
 - 기간제가 감소하고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종 중심의 시간제·용역 증가
- 비정규직 중 자발적 선택은 **51.5%**, 비자발적 선택은 **48.5%**
 -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4%, 자발적 비정규직의 62% 수준,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및 자발적 비정규직자의 1/3
 -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40대(27.9%), 고졸이하(86%), 단순노무·기능직(58.4%), 건설·도소매음식숙박업(46.2%), 30인 미만 사업장(81.2%) 등 취약계층이 다수
- 비정규직 선택동기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선택과 집중
 -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여건 조성: 비정규직 보호입법,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의 가시적 성과 거양(차별해소)
 - 비자발·비정규직 합정 탈출 지원: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근로감독행정 혁신, 최저임금 현실화 등 추진

1. ’06년 비정규직 일반 동향

- 금년도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57천명**, 임금근로자의 **35.5%**로 작년 동기 대비 **26천명 감소**(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년 8월)
 - ’01년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비정규직 비중도 2년 연속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이 >

(단위: 천명, %)

년도	’01. 8월	’02. 8월	’03. 8월	’04. 8월	’05. 8월	’06. 8월
비정규직	3,635 (26.8)	3,839 (27.4)	4,606 (32.6)	5,394 (37.0)	5,483 (36.6)	5,457 (35.5)

* ()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 증가하던 기간제(△6천명)와 일일근로(△51천명) 등 감소, 파견근로(13천명), 용역근로(68천명), 시간제 근로자(91천명) 등은 크게 증가

-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간제가 줄고 공공행정 및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경비, 청소 등) 중심의 시간제, 용역 등 증가
- o 임금, 근로복지 수혜율 등에서 정규직과의 격차 지속(별첨 1 참조)

2. 선택 동기에 따른 비정규직 특성

□ 선택 동기

- o 전체 비정규직 중 자발적¹⁾ 취업 규모는 51.5%, 비자발적 규모는 48.5%

< 고용형태별 자발적 및 비자발적 취업선택 구성 >

(단위: 구성비, %)

	고용형태별 취업선택 구성												
	임금 근로자	정규	비정규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특고	가정내	일일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발적	68.3	77.6	51.5	57.3	56.8	47.1	37.1	58.4	46.7	51.5	34.6	8.3	
- 비자발적	31.7	22.4	48.5	42.7	43.2	52.9	62.9	41.6	53.3	48.5	65.4	91.7	

- o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42.1%), 안정적인 일자리(28.0%) 등의 순
 - 자발적 비중이 높은 한시적(57.3%), 파견(58.4%)의 경우 '근로조건 만족'이, 특수고용형태(51.5%)의 경우 '노력한 만큼 수입 보장'이 제 1사유
- o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당장 수입이 필요(65.2%),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없음(15.5%),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3.9%) 등의 순
 -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 '학업, 교육훈련, 취업준비 위해' 등 경력개발·상승형 동기가 6.9%에 불과하여 막다른 일자리 가능성 시사

□ 근로조건 격차

- o 자발적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87.1%;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4%, 자발적 비정규직의 62%

< 시간당 임금 비교 >

(단위: 원, %)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자발적	비자발적
시간당 임금	9,590(100)	6,810(71.0)	8,353(87.1)	5,172(53.9)

1) 금년 경찰부가조사부터 비정규직 선택동기 조사 개시 : 지난주 일자리 형태로 일한 것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확인하고 근로조건 만족, 당장수입이 필요해서 등 10가지 중 주된 사유를 선택

- 근로복지 수혜율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 비정규직 사이에 6~7배의 차이가 있음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금	67.9	30.3	51.1	8.2
상여금	67.5	27.7	47.2	6.9
시간외수당	53.9	21.5	35.8	6.4
유급휴가	55.0	23.1	38.6	6.7

- 사회보험가입율도 자발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간 3배 이상 차이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자발적	비자발적
고용보험	64.7	36.3	56.3	15.1
국민연금	76.1	38.2	59.3	15.8
건강보험	76.1	40.0	61.3	17.4

□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주요 특성

- 일일(91.7%), 용역근로(53.3%), 시간(52.9%) 등에서 비자발적 비중 높음
- 규모 : 비자발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81.2% 집중, 자발적은 54.0%

< 사업장 규모별 자발적, 비자발적 비정규 비중 > (단위: 천명, %)

	전체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비정규직 전체	5,457 (100.0)	1,436 (26.3)	992 (18.2)	1,235 (22.6)	992 (18.2)	432 (7.9)	369 (6.8)
자발적	2,809 (100.0)	482 (17.2)	371 (13.2)	663 (23.6)	671 (23.9)	325 (11.6)	297 (10.6)
비자발적	2,647 (100.0)	954 (36.1)	621 (23.5)	572 (21.6)	321 (12.1)	107 (4.0)	72 (2.7)

- 성별 : 비자발적은 남성 52.4%, 여성 47.6%, 자발적은 남성 46.9%, 여성 53.1%
- 학력 : 비자발적은 고졸이하가 85.9%, 자발적은 57.5% 차지
- 연령 : 비자발적은 40대(27.9%), 30대(20.0%), 50대(19.9%) 등의 비중 순, 자발적은 30대(30.4%), 20대(26.8%), 40대(20.9%)의 순
- 직종 : 비자발적은 단순노무(38.0%), 기능원(20.4%), 서비스 종사자(13.0%)가 대부분, 자발적은 사무 종사자(20.7%), 단순노무(16.4%), 기술공(13.7%), 전문가(12.3%) 등의 비중 순
- 업종 : 비자발적은 건설업(24.7%), 도소매음식숙박(21.5%) 사업서비스업(12.9%) 등의 순, 자발적은 도소매음식숙박업(17.1%), 사업서비스업(16.9%), 제조업(14.5%) 등의 순

3. 정책적 시사점

- ① 조사 이래 비정규직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도·소매·음식·숙박업(141천명), 건설업(52천명) 등에서의 감소에 주로 기인
 - 고용구조의 개선보다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 기간제 감소, 공공 및 사업지원서비스 중심의 기간제·용역 등 증가는 고용의 외부화(직접고용감소·하청 등 간접고용확대) 확산추세 반영(추가적인 패널조사 및 분석 예정)
 - 여성·고령자·저학력·단순기능 등에 비정규직 집중,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혜율 등 격차 지속은 여전
 - * 최근 일부에서 비정규직보호대책의 강화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 부족 (별첨 2 검토자료 참조)
- ②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 및 인적 특성(경향성) 확인
 - 40대, 고졸이하, 일용·용역·기간제, 건설·도소매음숙업, 소규모 사업장 등
 - * 비자발성 및 근로조건 격차는 연령, 학력, 사업장 규모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비정규직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형성 가능성
- ③ 차별화된 비자발적 비정규직 정책의 개발 및 체계화 필요

4. 향후 대응 방향

- 고용형태 다양화 및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여건 조성·촉진
 - 비정규직 보호입법 조속처리,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의 차질 없는 시행(차별해소·남용방지)
 - 불법파견·위장도급 확대 억제를 위한 파견 및 도급 판별 기준 명확화
 - * 법원판례, 검찰 판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례중심의 판별 기준 구체화 작업 추진
- 비자발·비정규 함정 탈출 및 유입방지 대책의 체계화
 - 저학력·중고령자·소규모사업장 등을 위한 특화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및 차별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취약계층 중심의 근로감독행정 혁신 완료,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조기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4대 보험 징수통합 등 대책 추진 시급

<별첨 1> ‘06년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및 임금 등 근로조건

○ 비정규직 특성별 분포

- △ 남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0.4%, 여성은 42.7%
- △ 10대(71.7%)와, 60세 이상(69.0%)에서 비중이 높고 50세 이상 비중이 크게 증가
 - * ’06년 시간제 근로자 91천명 증가분 중 60세 이상이 43천명 차지
 - * 비정규직 중 50세 이상 비중 : 24.6(’02) → 24.2%(’03) → 23.3(’04) → 24.5(’05) → 26.8(’06)
- △ 중졸이하(55.5%) 등 저학력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나 최근 고학력화 추세 (’05년 대비 고졸이하 비정규직 123천명 감소, 대졸이상 97천명 증가)
- △ 가사서비스업(82.1%), 건설업(58.0%), 사업서비스업(54.2%) 등에서 비중 높음

○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수준은 6,810원으로 정규직(9,590원)대비 71.0% 수준

< 시간당 임금수준 >

(단위 : 원, %)

구 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01.8	’02.8	’03.8	’04.8	’05.8	’06.8
정규직	6,459 (100)	6,874 (100)	8,059 (100)	8,670 (100)	9,171 (100)	9,590 (100)
비정규직	5,152 (79.8)	5,533 (80.5)	5,767 (71.6)	6,377 (73.6)	6,462 (70.5)	6,810 (71.0)
전 체	6,108	6,507	7,313	7,822	8,179	8,602

*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3개월 평균) 수준은 정규직의 62.8%(’06년)

○ 근로복지 및 사회보험 수혜율도 증가추세이나 정규직의 1/2 수준 하회

< 근로복지 수혜율 >

(단위 : %)

	2005. 8.				2006. 8.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 정 규 직	68.6	67.4	56.6	58.0	67.9	67.5	53.9	55.0
○ 비정규직	28.8	25.5	21.1	22.7	30.3	27.7	21.5	23.1

<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 %)

	2004. 8.			2005. 8.			2006. 8.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정규직	61.5	72.5	73.8	63.8	75.7	75.9	64.7	76.1	76.1
○ 비정규직	36.1	37.5	40.1	34.5	36.6	37.7	36.3	38.2	40.0

< 교육 및 훈련 참여율 (%)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단시간	파견	용역	특수 고용	가정내	일일
		기간제						
31.2%	22.2%	23.7%	11.3%	39.3%	14.5%	46.0%	8.0%	2.4%
		23.8%						

<별첨 2> 비정규직 보호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저하 주장 검토

◇ 비정규직보호대책의 강화가 노동시장 보호막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감소를 초래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부의 주장 (동아일보 11.20 10면,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인용)

-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정책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강화를 일자리 창출 저하의 주원인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 비정규직 감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도 부족
 - ① '03년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의 급격한 증가에도 일자리는 감소
 - * '03년 취업자수는 '02년 대비 30천명 감소, 비정규직은 77만명 증가
 - ② 비정규직의 감소에 불구하고 임금근로자(정규 + 비정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업자) 규모의 감소 추세가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 최근 자영업 부분의 구조조정 진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 등 위축으로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이는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

< 전년대비 일자리 수 증감 추이 (천명) >

구 분	2002. 8	2003. 8	2004. 8	2005. 8	2006. 8
취 업 자	485	-97	256	465	317
비임금근로자	-5	-215	-181	82	-66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489 (204)	119 (767)	436 (788)	384 (88)	383 (-26)

- ③ 기간제(△6천명)가 감소하고 공공 및 사업지원서비스 중심의 시간제 근로자(91천명), 용역근로(68천명) 등이 증가한 것은 고용의 외부화 추세를 시사
 - * 시간제는 공공행정(30천명), 교육서비스(22천명) 등 업종에서 증가,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64천명)가 증가분의 다수를 차지